

여야, '김건희 여사 검찰 비공개 조사' 거센 공방

야 "자작쇼·측천무후·특혜출장조사" 국힘 "영부인 결단으로 조사 성사" 대통령실 "수사중 사안 언급 부적절" 이원석 총장 "원칙 안 지켜져" 사과

여야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내 검찰 조사를 두고 거센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면죄부", "자작쇼", "황제조사", "검찰총장 패싱"이라며 맹비난하고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팀의 의지와 김 여사의 결단으로 조사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조사한 것에 대해, "검찰 스스로 법 앞에 인사권자의 가족은 예외임을 보여줬다"며 "검찰이 공정하게 밝힐 의지가 없다는 걸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은 용산만을 위해 존재하는 곳인가. 국민권익위도 검찰도 김건희, VIP 앞에선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라며 "허울뿐인 소환조사는 결국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입을 온 국민이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상태로 김 여사 조사를 진행했다는 '검찰총장 패싱' 논란도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왼쪽)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서영교, 이근태, 이성운 위원 이 22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장수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맡은 곳등으로도 무시하고 사람을 보내 김 여사에게 가이드라인을 들고 왔다"며 "김 여사가 결정하고 윤 대통령이 실행에 옮겼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나라의 진정한 VIP가 누구인지 감이 바로 왔다"며 "이 정도면 중전마마 조사를 넘어 여제 조사 아닙니까. 김건희씨가 한국판 측천무후입니까"라고 비난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검찰총장도 모르는 '김건희 특혜 출장

조사"라며 "검찰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직격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는 검찰총장만 바보로 만들어 버렸다"며 "웃으며 팔짱끼고 수사받던 우병우(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가 떠오른다. 윤석열 정권의 공정과 상식의 수준만 확인시켜줬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영부인 결단으로 조사가 성사됐다"고 반박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회의에서 "의혹을 명쾌히 해소하려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의지, 영부인의 결단으로 조사가 성사된 것"이라고 강조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회식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

했다.

그는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서도, "도이치모터스사건과관련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것은 민주당 문재인정권의 추미애 법무부장관이었다"며 "오히려 검찰총장에게 사전보고를 하게 되면 담당 검사가 검찰청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호법상 영부인은 엄연한 경호 대상으로 경호 문제가 없는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하는 것은 합당한 조치"라며 "야당은 더 이상 정치공세를 부리지 말고 차분히 수사결과를 지켜 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수사 중인 사안에 입

장을 내는 건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김 여사는 명품가방 수수 의혹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일 오후 1시30분부터 이튿날 오전 1시20분까지 약 11시간50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다.

현직 영부인이 검찰 대면 조사를 받은 것은 김 여사가 처음이다.

이와 관련,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우리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사과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안도걸 "중국 해외 직구 제품 99%가 면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사진)은 22일 "중국 직구의 99.3%가 면세 대상인 150불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구매 급증에 따른 물품 반입 대책, 국내 제품과의 과세 형평성이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 해외직구를 통해 세관을 통과한 물품의 가액은 7억500만달러(한화 9810억)로, 평균 가액은 24.4달러에 불과했다.

통관 건수는 80% 가량 크게 증가(1만 5877→2만8720)해 중국산 제품의 저가 공세가 재확인됐다.

가전제품이 전체의 1/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의류, 핸드백, 신발류가 뒤를 이었다. 어린이용 완구·인형도 269만건 이상 구매됐다.

이들 제품의 안정성이 문제인 데다 대부분 면세인 중국 제품과 달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국내 제품은 역차별을 당하는 상황이다.

안 의원은 "국내 영세 자영업자들의 상권까지 잠식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소비자의 권리와 국민 안전이 함께 고려되는 방안을 신중히 찾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전남 지역안전지수 5년간 '전국 최하위권'"

교통사고·화재 등 평균 4~5등급 나광국 "안전강화 대책 강구해야"

전남의 지역안전지수가 최근 5년간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으나 전남도는 미온적인 대처를 보이고 있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전남도의회 나광국(무안2·사진) 의원에 따르면 '지역안전지수'는 행정안전부가 자살, 범죄,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감염병 등 6개 분야의 지자체 안전역량을 평가하는 지표로, 1등급에 가까울수록 안전함을 의미한다.

올해 2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 전국 지역 안전지수 공표'를 보면 전남은 자살 3등급, 범죄 2등급의 교통사고와 생활안전 분야에서 4등급, 화재와 감염병 분야에서는 5등급을 기록하며 현저히 낮은 안전지수를 기록했다. 특히 교



통사고 분야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가 2022년 252명에서 지난해 188명으로 25.4%나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4등급을

기록했다.

더 큰 문제는 최근 5년과 자살 및 범죄는 2등급에서 3등급을, 나머지 분야는 4등급 또는 5등급을 받는 등 분야별 등급 변화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나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함께 22개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안전역량을 혁신하는 전방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 의원은 "지역안전지수를 산출할 때 지자체의 위해(危害) 발생 예방 및 대응

에 대한 노력을 평가하는 경감지표가 있다"며 "오랜 기간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전남도의 개선 노력과 의지가 부족했음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개선계획 수립과 협력체계 구축, 우수지자체 벤치마킹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답변에 나선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전남도 또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분야별 지역안전지수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교통사고의 경우 민선 7기부터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추진하면서 지난해 한 단계 상상을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와 같은 지적과 제언에 대해 깊은 검토를 통해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지현 기자

이석하 진보당 영광위원장, 영광군수 출마 선언

"군민 삶 지키는 군수 될 것"

10·16 영광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진보당 영광지역위원회 이석하(사진) 위원장이 22일 영광군청 앞에서 출마기자회견을 갖고 영광군수 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이성수 전남도당 위원장, 진보당 오미화·박형대 도의원 등 진보당 관계 인사와 윤일권 전농광전연맹 의장, 노병남 영광군농민회장을 비롯한 농민회 회원, 문화현 공공연대노동조합 전남본부장을 비롯한 노동자들이 함께했다.

이석하 위원장은 "30년 기득권 정치로 인해 영광군민은 균형운영과 예산 편성에서 소외돼왔다"며 "군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 혁신을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영광군민의 삶과 터전을 지키는 군수, 영광의 미래를 준비하는 군수가 되겠다"며 △SRF 쓰레기 발전소 허가 취소 △중소자영업자 지원자금 100억 조성 △학생수당 월 30만원 지급 △청년농업인 정착지원금 3억원 지급 △주민자치회 운영 등 영광발전 비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진보당은 오는 8월8일 영광군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후보선출대회에서 당원투표를 통해 후보자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오지현 기자

우상호 "이재명 90% 지지율, 바람직하지 않아"

"호남 등 지역 대표성 반영돼야"

우상호(사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90% 이상 누적 득표율을 얻는 등 전당대회 경선에서 압승을 이어가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쓴소리를 했다.

우 전 의원은 이날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 대권후보이고 탄압받는 지도자이며 총선을 승리로 이끈 당 대표 이외의 다른 사람을 선택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는 이걸 또 자연스럽게 봐야 되는데 문제는 득표율이



너무 높으니까 약간 뒷맛이 (쓸쓸하다)"고 말했다.

우 전 의원은 "(후보들간 경쟁이) 팽팽할 정도는 아니어도 그래도 이당의 3분의 1 정도는 균형을 맞춰주려고 한다는 걸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당원들이 선택하는 걸 인위적으로 비율을 조정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김두관 후보의 주 지지 지역이나 서울, 경기로 가면 조금 균형은 맞을 텐데 초기에 90%대의 지지율이 나오는 건 민

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 결코 바람직한 건 않다"며 "다양성이 있고 살아 있는 정당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전 의원은 친명(친이재명계) 일색 지도부가 꾸려질 가능성을 두고서는 "수도권 중심이라든가 특정 지도자 중심의 당원들의 선택이 몰려가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호남 같은 경우는 민형배 의원 같은 분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 친명인데 아니든 지역 대표성이라는 게 분명히 반영돼야 한다"며 "특정 계파나 특정 지도자와 관련된 분들이 전부 들어올 것 같으면 그냥 총재, 부총재 체제로 가지, 굳이 10명의 집단 지도체제로 갈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서울=김선욱 기자